

2019년 11월 1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 주원철(044-201-2031), 서기관 김소형(2036),
농업통상과장 김경미(044-201-2051), 사무관 이인애(2054) / 제공일: 11월 1일(총 3매)

적정임가 농사짓고 안정차고 소비자는 나라

-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추진하고자 WTO 감축대상 정책은 지양하고, 허용보조 확대를 추진
- WTO 보조금 한도는 지급 가능한 최대 한도액을 의미, 쌀 수매제는 WTO 보조금 한도 초과 우려로 2004년 폐지된 후, 공공 비축제와 직불제로 개편

[세계일보 11.1일자 “농업보조금 WTO 한도의 16%만 썼다.” 보도 해명]

-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추진하고자 WTO 감축대상 정책은 가급적 지양하고, 허용보조를 확대하는 것이 정부 정책방향임
 - 정부 정책 결정 시 품목별 가격동향, 수급안정성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WTO 보조금 지급한도는 이러한 고려 요인 중 하나임
- WTO 보조금 지급한도는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이며, 보조금 한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
 - 주요국 대부분도 WTO 보조금 지급한도의 일부만 사용
- 쌀 수매제는 ①한도가 없는 허용보조인 ‘공공비축제도’와, ②변동직불금(감축대상보조, 한도 존재) + 고정직불금(허용보조, 한도 없음)으로 재편되어 운영 중
- 세계일보 <농업보조금 WTO 한도의 16%만 썼다>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

언론 보도내용

- 정부는 지난 20여년 간 WTO 개도국에게 한도가 부여된 농업 보조금의 15.5%만 집행. 특히 쌀 수매제가 폐지(2004년)된 뒤에는 정부 보조금 규모가 더 쪼그라든 것으로 분석됨
 - 2005년 이후 WTO 한도와 실제 보조금 집행액의 차이는 더 벌어짐. 1995-2004년 AMS, DM 한도의 실제 연평균 집행률이 27.1%인 반면, 2005-2015년 집행률은 7.0%에 불과



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-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WTO 감축대상 정책은 가급적 지양하고, 허용보조를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임
 - 특히, WTO 보조금 지급한도가 없는 쌀 고정직불금과 같은 허용보조의 경우,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
- * 허용보조 (’95) 39,900억 원 → (’00) 50,541 → (’05) 52,736 → (’10) 67,678 → (’15) 73,643
- 이 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감축대상 보조인 쌀 변동 직불제 대신 허용보조에 해당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
- 정부는 정책 결정 시 품목별 가격 동향, 수급 안정성과 시급성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정책 방향에 맞게 보조 및 융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선택·운영하고 있음
 - WTO 보조금 지급한도는 정책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 중 하나로서,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보조금 정책을 결정·집행하고 있음

□ WTO 감축대상 농업보조금 한도는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을 의미하며, 정부의 재정지출과 달리 보조금 한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

○ 주요국 대부분도 보조금 지급한도의 일부만 사용하고 있음

□ 쌀 수매제는 ①식량안보 목적의 비축과 ②가격 보조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나, WTO AMS 한도 초과 우려*로 2004년 폐지된 이후 '공공비축제도'와 '쌀 직불금(고정직불금 + 변동직불금) 제도'로 개편되었음

* '16년 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의 경우 WTO 지급한도(14,900억 원) 초과

① 식량안보 기능의 '비축'은 WTO 보조금 지급 한도가 없는 허용보조인 '공공비축제'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며,

② '가격 보조' 기능은 변동직불금(감축대상 보조, 한도 존재)과 고정직불금(허용보조, 한도 없음) 등 '쌀 직불제'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음

□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체질 강화를 위해 국제규범에 합치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개발하고,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음